

“사업 저지가 진정한 수행”

4대강 심포지엄... 불교·환경·사회·정치 관점에서 잘못 지적

심포지엄은 1분과 서재영 불학연구소장, 2분과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3분과 이동홍 한양대 국문과 교수, 4분과 서용진 前 환경경정의 사무처장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1분과 불교 생태적 관점 4대강 사업의 대량살상

‘생태(生態)’는 살아있는 것이 드러내는 아름다움이며 생동하는 마음 상태이다.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해 못 생명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의 4대강은 국토의 대동맥이고 대정맥이다. 4대강에 본격적으로 정비가 투입된 이후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공사가 지속되고 확대될수록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인공적으로 박제화 된 공사 후의 모습은 국민의 친환경적 사유체계를 변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에 의해 한반도의 인문·지리적 환경질서를 파괴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좋을 수 있다.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육망하는 것은 청계천과 같은 제2의 건설성공 신화이다. 청계천 복원은 거대한 콘크리트 어항을 만든 것에 불과했다.

‘4대강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위협적이다. 70%에 가까운 국민들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

릅쓰고 비민주적 방식으로 강행되는 현실에서 정권과 기득권을 공유하려는 자들의 탐욕을 볼 수 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진행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무수한 생명 터전을 파괴하는 대량살상이다. 환경파괴와 대량살상을 막는 것이 진정한 방식의 실천이다.

불교적 시각으로 4대강 사업 강행은 독선의 아집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4대강 사업은 몰자비한 처사이며, 제법인 존재를 파괴하는 악행이다.

#2분과 환경·생태적 관점 4대강 사업의 ‘보’는 운하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의 저항에 의해 저지되자 정부는 ‘보’를 만들 것을 요구하며 4대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는 운하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흐르는 하천에 보나 댐 같은 횡단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 물의 흐름이 정체되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하천이 아니라 호수(늪과 호수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된 수역)화된다. 강이 호수화되면 정체수역으로 바뀌면서 각종 하수나 폐수 등 유기물질이 유입돼 인(糞) 같은 영양물질이 많아지고 수생생물의 성장과 번식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부영양화(영양물질이 풍부해지는 현상)를 초래한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사부대중은 불교·환경·사회·정치 어느 시각으로도 4대강 사업은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물속의 산소가 결핍되고 결국 수질악화가 발생한다.

특히 분류에 유입되는 지천(支川)의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류의 유속이 느려지거나 차단되면 수질악화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부가 계획하는 남한강의 3개의 보 사이에는 수질이 좋지 않은 두 개의 하천이 유입되고 있다. 남한강의 주요 지천인 양화천과 북하천은 갈수기에 생활환경기준 하천수의 4-5등급을 오르내리는 상태로 식수는 고사하고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 이 조건에서 보를 설치해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정체수역으로 바뀐다면 수질오염이 극심해질 것은 자명하다.

보를 설치해도 수질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현재 팔당댐 상류지역과 한강 서울시계인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 사이의 수질을 비교하면 진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2008년 4-6월과 2009년 4-6월에 팔당댐 수질은 1급수를 유지하지만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노랑천에서는 2급수로 떨어지고 양양에서는 3급수로 급락했다.

한반도 운하포기의 결정적 계기였던 역사문화 파괴에 대응하고자 4대강 주변의 역사문화유적에 대해 조사했다. 4대강 관련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한 23개 기관 모두 무허가 기관이라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다.

#3분과 사회문화적 관점 수몰 문화재 대책 절실

한강과 낙동강 및 우리나라 4대강에는 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문화재청이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예정지 주변에는 문화재가 총 243점이 있다. 이중 지정문화재가 94개, 매장돼 있는 문화재가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졌던 지을 스님은 “생명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수경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과 불교사회단체 사부대중은 대운하와 4대강 개발 반대를 위한 오체투지, 4대강 순례 등 크고 작은 실천을 통해 개발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와 예교부터가 공동주최한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각 분과별로 간추렸다.

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에 의하면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은 육상지표조사기관과 수상지표조사기관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지표조사 참여 23개 기관은 모두 수중지표조사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허가기관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화재 조사는 원천 무효다. 국토해양부가 만약 이번 지표조사를 바탕으로 면피를 한다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재보호법 111조 4항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된다.

또 전체 조사면적 29만1300만㎡에 달하는 지역을 각 권역별로 나누어 23개 기관에서 1달 만 만에 육안 조사했다. 이는 졸속조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전문위원 중 일부는 공무원(국립박물관, 문화재청)이 포함돼 있어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

#4분과 정치·경제적 관점 사업 강행, 비민주적 사업 표본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개발주의 성장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항수에 기반해 현 이명박 정권은 집권에 성공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직후 벌어진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응하는데 실패하고 70년대식 대규모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을 통해 만회하

려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중앙과 지방에 포진한 토건 세력의 지배력과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이룩하려는 정치적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4대강 사업의 추진은 정권적 차원의 권력이 집중돼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되는 극단적인 비민주적인 사업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사회의 개발 및 성장 지상주의의 ‘토건국가’라는 구조적으로 형성된 국가형태를 통해 실현돼 왔다.

한편, 제1분과장 서재영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불교는 생태환경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환경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적다”며 “불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행생활이 환경운동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 저지가 진정한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글=박선주 기자·사진=박재환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사은품 증정. 특가 145,000. TEL 02)2004-8216



준비와 묵락

신도회 활성화, 스님부터 나서야

최근 수원 용주사 신도회(회장 민학기)가 ‘제2교구신도회의 활동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교구신도회의 역할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스님은 “전국 25개 본사와 균종특별교구는 지역 신도단체연합 성격의 교구신도회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주사 외 9교구본사 동화사, 17교구본사 금산사, 24교구본사 선운사 등

4곳 뿐이다. 그나마 신도회가 활성화 된 곳은 용주사 등 2곳 뿐인 실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스님들의 ‘신도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이 필요 없다’ ‘신도회가 있으면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부추킨다’는 인식 먼저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학기 용주사 신도회장은 “현행 신도회는 권한은 사찰에 종속돼 있고 운영은 방관된 경우가 많다”며 “교구본사 및 각 사찰은 신

도회의 자생능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회 등 신도조직 활성화에 대해서는 종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도 포교원을 비롯한 조계종 제3대 집행부는 ‘신도교육 및 조직화 4개년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사업은 ‘100만 신도 등록, 10만 교육훈련 신도, 1만 전문 인력 신도 양성’ 달성을 목표로 한다. 부처님 제자는 사부대중이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

대중(四部大衆)의 화합된 무리가 집단 의식을 구현하는 곳이 승가(僧伽)다. 사부대중은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는 도반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에서 재가자는 출가자의 아랫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용주사 신도회의 이번 행사가 포교 정책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항상 한국불교의 숙원사업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재가신도 조직의 활성화로 이어질 길 기대한다. 이상근 기자 un82@buddhapia.com



더 나은 불교는 있다

‘불교평론’ 제42호서 해법 제시

“한국 불교의 해법은 △종무행정 조직의 합리화와 효율화 △사회·역사와 소통·부합하는 승가교육 △포교와 신행의 혁신에 달려있다.” “더 나은 불교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법제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계간 <불교평론>(편집인 홍사성) 제42호에서 새로운 시각의 해법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이병두 칼럼니스트는 기고문 ‘합리화·효율화 시급한 행정조직’에서 “현재 종단행정에는 역경·도제 양성·포교의 3대 과제가 실종됐

다”며 “이들 과제에 대한 종단적인 의욕은 크지만 종무행정이 세속사회의 것을 급하게 모방하면서 생긴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총무원에 인사와 재정 등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종무원 채용에도 전문가가 없는 것은 문제”라면서 “기관별 인사와 재정 독립성을 보장하고 호계위원·법규위원 선임에 앞서 자질 검증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 스님(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은 기고문 ‘승가교육, 사회와 소

통하고 역사에 부합해야’에서 “불자 감소와 고령화의 해법을 승가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바람직한 승가교육이 되려면 스승가자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사회와 소통하고 역사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포교와 신행, 구매를 벗어라’는 기고문에서 “포교주체의 재정립 먼저 한국 불교가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찰이 도심지역에 적절하게 분포되지 못해 포교 역량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며 “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위 사찰이 전국적으로 분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기자

7권본 능가경 역주. '선종의 뿌리' 이자 '최상승선의 지침서'. 근현대 한국불교가 걸은 역사의 발자취를 대중적 눈높이에 맞춰 풀어쓴 책! 백년 동안 한국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길라잡이. 1870년대 개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정화, 그리고 1990년대 개혁까지, 120여 년 동안 우리 불교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가려내, 각각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불교사적 의미를 성찰한다. 근현대 한국불교를 관통하는 사건, 단체,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주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가?